

# 왜 高度成長經濟의 企業들은 成長指向性이 강한가\*

## - 진화론적 설명 -

姜 斗 龍\*\*

### 논 문 초 록 :

본고에서는 기업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예상 외의 성장을 상승이 기업행태의 차이에 의한 기대성장률의 불균등한 변화 및 그에 따른 기업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을 보임으로써, 고도성장과 성장편향적 기업의 비중증가가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같은 모형은 한국 등 고도성장경제의 기업들이 보이는 강한 팽창지향적 행태의 배경이나, 또는 그 거시적 반영으로서 고도성장경제들의 높은 투자율 및 그 변화추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논리를 제공한다. 그 논리를 요약하면, 한국 기업의 높은 성장지향성의 배경은 고도성장이 성장지향성이 강한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들의 시장 내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아울러 이 같은 본고의 논리는 최근 경제위기 및 기업행태와 관련한 한국경제의 현안문제라든가 또는 누적적 변화를 수반하는 여타 경제현상의 분석에서도 유용한 시사와 분석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고도성장, 기업행태, 한국 경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O4, L2

## I. 序

최근 한국 경제의 금융위환위기 이후 새삼스럽게 한국 기업들의 팽창지향적 행태가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 한국 기업이나 고도성장기의 일본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보다 오히려 성장극대화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높은 성장지향성을 보인다고 말해진다. 이들 기업의 행동원리가 실제로 성장극대화에 보다 가까운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이들이 서구기업들에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 본고는 필자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론집』 36(2)호에 발표했던 “고도성장과 기업의 동태적 적극성”을 보완, 발전시킨 논문이다. 본고에 대해 유익한 비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훨씬 팽창지향적인 경영행태를 보인다는(보여 왔다는) 데는 거의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기업행태적 특성의 거시적 반영이라 볼 수 있는 사실로서, 한국이나 일본, 그 밖에 고도성장을 보이는 동아시아경제들의 투자율은 유난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상기할 수 있다.<sup>1)</sup> 특히 이중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투자율은 저축률을 상회하는 추이를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높은 투자율은 이들의 높은 저축률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본고는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고도성장경제가 보이는 동태적 적극성(미시적으로는 기업행태의 강한 성장지향성, 거시적으로는 높은 투자율)의 배경을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하여 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즉, 왜 고도성장을 보이는 경제에서 기업들이 그러한 적극성을 띠게 되고, 이것이 다시 고도성장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견 생각하기에 고도성장경제에서 기업이 강한 성장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특별히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로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경제의 성장률이 높은만큼 그 경제주체들이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논리가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시각에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이같은 관점은 기업의 높은 성장지향성이나 높은 투자율 등이 고도성장의 결과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와 역방향의 인과논리도 그에 못지않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 근거없이 이같은 인과관계를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위의 단순논리는 고도성장경제에서 기업의 성장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단순히 기업의 기대성장률이 높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성장률이 높은 경제에서 기업이 높은 기대성장률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성장지향성이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대성장률이 높다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말하였듯이 기업의 극대화행태에서 이윤 못지않게 성장률에 비중을 둔다거나 성장과 관련한

1) Summers and Heston(1991)의 data set에 의거하여 전세계 중저소득국을 1960-1985년간의 평균투자율의 크기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눌 때 동아시아 고도성장국가(아시아 NICs 4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는 모두 최상위그룹에 포함된다. 더욱이 이들의 투자율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최근으로 올수록 대체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투자율은 남미국가들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한다(World Bank, 1993, pp.40-43).

위험기피도가 매우 낮다고 할 정도의 차이, 즉 행동성향 내지 행동원리의 차이까지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부분은 분명 위와 같은 단순논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고도성장을 경제주체의 행태적 특성과 연관짓는 시각은 학술적 논문보다도 저널리스트틱한 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도 없지는 않다. 예컨대, 오다기리(Odagiri, 1981)는 기업이 이윤과 성장률의 어떤 조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순수한 이윤극대화에 비해 거시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이론모형의 한 응용으로, 고도성장기 일본 기업의 행태가 성장선호적이며 그것이 일본 경제의 높은 성장을 가능케 한 한 배경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다기리의 논리는 특정한 기업행태로부터 높은 성장을 도출하는 것이지, 왜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경제가 특정한 행태적 특성을 보이는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일본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기업들의 행태적 특성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사회학적인 논리에 그치고 있다.

본고는 이와 달리 고도성장을 보이는 경제가 왜 특정한 행태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경제적 논리를 통해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모형<sup>2)</sup>의 논리는 그 기본틀에 있어서 생물학에서의 진화의 논리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가 다양한 행태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 어떤 환경적 변화가 특정한 행태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내 기업구성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에 누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인다. 본고의 논리에 진화론적 설명이라 부제를 붙인 것은 이같은 측면에 근거한다.

글머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 기업의 팽창지향적 행태의 문제는 특히 최근 경제위기 이후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새삼 더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의 논의는 그러한 최근의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고도성장과 기업구성 변화간의 관계를 보이는 모형을 제시한다. 제Ⅲ절에서는 모형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로서, 모형이 제시하는 고도성장경제 기업행태의 배경에 대한 논리를

2)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Odagiri(1981)의 모형과는 전혀 별개의 독자적인 것이다.

설명하고, 아울러 최근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행태 및 구조조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본고의 논리로부터 얻어지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어 제 IV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도성장경험으로부터 본고의 모형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찾아보고 제 V절에서 논문을 끝맺는다.

## II. 모 형

### 1. 기업의 목표성장률과 기업행태 비동질성의 가정

고정자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상정해 보자. 시장은 불완전경쟁적이어서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며 투자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시장하에서 기업은 장래 수요에 대한 전망과 자신의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생산능력의 최적성장률을 도출한 뒤, 그에 따라 설비투자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개별기업의 수요변화를 직접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전체의 추세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의 추세성장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의 최적성장률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이 향후 일정 기간(예컨대,  $T$ 년간) 동안의 시장추세성장률에 대한, 공통된 정보(또는 예상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정 1] 기업들은 향후  $T$ 년간의 시장추세성장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시장추세성장률 전망하에서 향후  $T$ 년간의 설비투자 계획수립을 위한 최적성장률 내지 최적자본증가율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最適成長率(자본증가율)을 目標成長率이라 하기로 한다. 기업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장추세성장률의 전망치를  $G_e$ , 시장 내의 한 개별기업  $i$ 의 기간중의 목표성장률을  $g_i^*$ 라 표기하기로 한다(하첨자  $i$ 는 경우에 따라 생략한다).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2] 경제는 단일부문(단일시장)으로 구성된다.

[가정 3] 기업수의 추세적 변화는 없다.

[가정 4] 초기조건으로서 기업들의 규모가 초기상태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위와 같은 단순화의 가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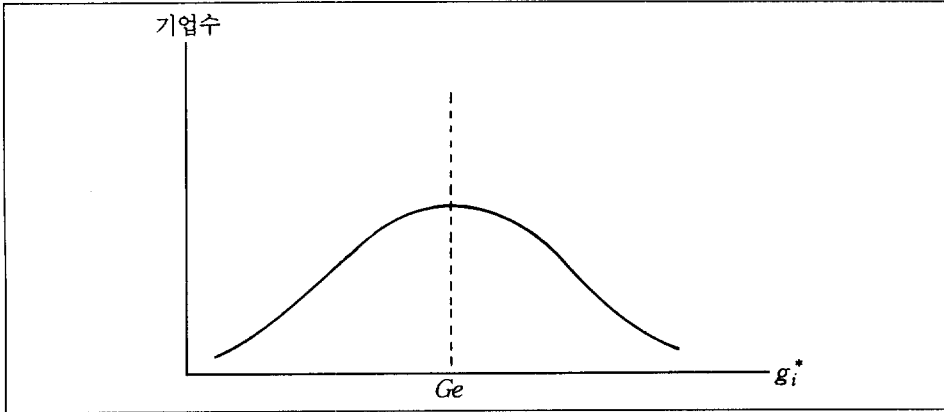
[가정 5] 기업행태 비동질성의 가정) 기업들은 서로 완전히 동질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동일한  $Ge$ 의 정보와 생산함수가 주어진 상황하에서도 기업들의 목표성장률  $g_i^*$ 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가정은 흔히 사용되는 대표기업 가정과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동일한  $Ge$ 의 정보와 생산함수가 주어진 상황하에서도 기업들의 목표성장률  $g_i^*$ 는 서로 다를 수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 또는 성향의 차이이다. 통상적인 이윤극대화에 따르는 경우 목표성장률은  $T$ 기까지의 이윤흐름과  $T$ 기 말 자본잔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극대화하는 성장률로써 도출된다. 이 때 실제로 이윤결정에 변수가 되는 것은 전체시장성장률의 전망치( $Ge$ )가 아닌 그 기업에 대한 시장수요성장률이다(이를  $g_i$ 로 표기하기로 한다). 설사 시장추세성장률이 알려져 있어도 개별기업에 대한 수요성장률( $g_i$ )은 목표성장률 결정시점에서는 미지의 변수로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하나의 전망치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Ge$ 하에서도 기업의 낙관적 또는 비관적 편향에 따라  $g_i$ 에 대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또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업이 목표성장률을 도출함에 있어,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기대이윤의 크기뿐만 아니라 투자에 수반하는 리스크(이윤의 분산)도 선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즉, 극대화에 기대이윤의 크기뿐 아니라 이윤의 분산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의 위험 기피도의 차이가 목표성장률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극대화의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업이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의 대상에 이윤과 아울러 성장률도 포함시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이윤과 성장률의 어떤 조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그 조합의 구성비가 기업마다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에서 성장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성장선호도라 하여  $\psi$ 로 표기하면,  $0 \leq \psi \leq 1$ 이며,  $\psi$ 의 값은 기업마다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psi = 0$ 인 경우는 통상적인 이윤극대화에 해당하며,  $\psi = 1$ 이면 성장률 극

〈그림 1〉



대화에 해당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기업의 목표성장률은 다음과 같은 기업효용함수의 극대화로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업마다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다를 수 있다.

$$\text{MAX}_{g_i^*} U \{ epr(g_i^*, Ge, \dots), eg(g_i^*, Ge, \dots), \sigma_{epr} \} \quad (1)$$

(단,  $U$ : 기업효용함수,  
 $epr$ : 기대이윤( $U_{epr} > 0$ ),  
 $eg$ : 기대성장률( $U_{eg} \geq 0$ ),  
 $\sigma_{epr}$ : 이윤의 분산)

위 가정에 따라 기업행태에 비동질성이 존재할 때, 기업의 목표성장률  $g_i^*$ 은  $Ge$ 가 주어진 하에서도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목표성장률의 도출과정에서 기대이윤이 주된 변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 3]하에서 목표성장률이  $Ge$ 에서 크게 괴리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목표성장률이 반드시  $Ge$ 와 일치할 이유도 없다. 일반적으로 목표성장률이 높을수록 기대이윤의 분산이 커진다는 점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위험선호적인 기업일수록 목표성장률은 높고 위험기피적인 기업일수록 목표성장률은 낮을 것이다. 또 Odagiri (1981)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성장선호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목표성장률은 높게 된다. 요컨대, [가정 3]과 [가정 5]하에서 기업들의 목표성장률( $g_i^*$ )은  $Ge$ 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분포를 보일 것이라 볼 수 있다(<그림 1>참조).

이제 시장 내 기업들 중  $g_i^* > Ge$ 인 기업들, 즉 평균에 비해 위험선택적이고 적극적인(또는 성장선택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기업들의 그룹을 A, 반대로 안전지향적이고 위험기피도가 높아  $g_i^* < Ge$ 인 기업들의 그룹을 B라 하기로 하자.

이 때 각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목표성장률의 가중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_A^* \equiv \sum_{i=1}^{N(A)} g_i^* \cdot s_{iA} \quad \forall i \in A \quad (2)$$

(단,  $s_{iA}$ : 기업  $i$ 의 그룹 A 내에서의 비중,

$$\sum_{i=1}^{N(A)} s_{iA} = 1, N(A): A에 속한 기업 수)$$

$$g_B^* \equiv \sum_{i=1}^{N(B)} g_i^* \cdot s_{iB} \quad \forall i \in B$$

(단,  $s_{iB}$ : 기업  $i$ 의 그룹 B 내에서의 비중,

$$\sum_{i=1}^{N(B)} s_{iB} = 1, N(B): B에 속한 기업의 수)$$

이 경우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을 사실상 각각 하나의 대표기업으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A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목표성장률  $g_A^*$ 를 갖는 하나의 대표기업으로, 또 B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목표성장률  $g_B^*$ 를 갖는 하나의 대표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일 목표성장률  $g_i^*$ 의 분포가  $Ge$ 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면,  $g_A^*$ 와  $g_B^*$ 는  $Ge$ 에 대해 대칭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대칭적인 분포를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6]  $g_A^*$ 와  $g_B^*$ 는  $Ge$ 에 대해 대칭적인 위치에 놓인다. 즉,  $g_A^* - k = Ge = g_B^* + k$ 를 충족하는 양수값  $k$ 가 존재한다.

## 2. 루이스적 경제의 가정

한편, 기업들의 목표성장률이 결정되면 이로부터 도출되는 경제 전체의 事前的 성장률이란 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를  $Gd$ 라 표기하기로 하자.  $Gd$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d \equiv \sum_{i=1}^N g_i^* \cdot s_i \quad (3)$$

(단,  $s_i$ : 기업  $i$ 의 시장 내에서의 비중,  
 $\sum_{i=1}^N s_i = 1$ ,  $N$ : 기업 수)

이는  $g_A^*$ ,  $g_B^*$ 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Gd = g_A^* \cdot s(A) + g_B^* \cdot s(B) \quad (4)$$

( $s(A)$ ,  $s(B)$ : 시장 전체 내에서 그룹  $A$ , 그룹  $B$ 의 비중.

$$s(A) + s(B) = 1^{3)})$$

$Gd$ 는 기업들의 목표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는 성장률이므로 결국 투자수요측면에서 결정되는 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Gd$ 와  $G$ 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가정 7] 사전적 성장률( $Gd$ )은 항상 실현된다. 즉, 실제성장률 ( $G$ )는 사전적 성장률 ( $Gd$ ) 그대로 결정되며, 따라서  $G=Gd$ 이다.<sup>4)</sup>

기업의 투자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성장률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가정은 성장이 기업의 투자수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공급측면에서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공급측면, 예컨대 노동력증가율이나 기술진보율 등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위 가정은 분명 매우 강한 가정이다. 하지만 경제에 공급측면에서 변화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또한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에 해당하는 예로서 우선 변화가 음(陰)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생산프론티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생산요소증가에의 제약이라

3) 목표성장률이  $Ge$ 와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면  $s(A)+s(B)<1$ 이겠지만, 그러한 기업의 존재 여부는 본고의 논리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4) 離散的 時間(discrete time)을 전제한다면, 뒤에서 살펴볼 외생적 충격의 존재가능성을 감안할 때, 엄밀히 말해 今期의 사전적 성장률이 다음기의 실제성장률을 결정한다고(즉,  $G(t)=Gd(t-1)$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든가 기술진보의 제약 등이 존재하지만, 거꾸로 생산프론티어 안쪽에서의 변화 (또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변화)에는 공급측면에서 아무런 제약이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로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어 유희생산능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본고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로서, 균제성장 (steady state growth) 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따라서 성장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한 저개발경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루이스(W.A. Lewis(1954))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여 노동공급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에는 위 가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자본축적 수준이 낮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개발경제가 해외로부터의 자본차입이 가능하고 차입가능규모에 제약이 없는 경우나, 근대부문의 노동생산성 및 기술진보율이 전통부문보다 높고 전통부문의 고용비중이 충분히 커서 양 부문 간의 자원이동을 통해 적어도 일정 기간은 성장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가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같은 세 번째 측면, 즉 저개발경제의 성장의 경우를 주로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루이스의 무한노동공급경제가 위 가정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편의상 [가정 7]을 루이스적 경제의 가정이라 하기로 한다. 다만, 위의 몇 가지 경우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루이스적 경제는 반드시 루이스(1954)에서 실제로 상정한 경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즉, 이른바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한 경제라도 위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다.<sup>5)</sup>

### 3. 균형의 조건

이제 균형을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 먼저 균형은  $Gd=G=Ge$ 를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앞에서 루이스경제의 조건가정으로부터 이미  $Gd=G$ 는 충족되므로  $Ge=G$ 이면 균형이다.

한편, 균형은 그 개념정의상 어떤 외적 충격이 없는 한 균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그룹(대표기업) A의 기대성장률(성장률의 기대치)과 그룹 B의 기대성장률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5)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고도성장경제는 루이스轉換點 통과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Minami(1973)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경제는 1960년 경, Bai(1982)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초에 이 전환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다. 만일 기대성장률이 두 그룹 간에 차이가 날 경우 양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변화함으로써 사전적 성장률( $Gd$ ) 및 따라서 실제성장률( $G$ )이 달라지고 그 결과 균형( $G=Ge$ )은 파괴된다. 예컨대 {그룹 A의 기대성장률} > {그룹 B의 기대성장률}인 경우, 궁극적으로 {그룹 A의 시장점유율( $s(A)$ )}이 {그룹 B의 시장점유율( $s(B)$ )}에 비해 상승하게 되어 식 (4)로부터  $Gd$  및  $G$ 는 상승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Gd(G)$ 가 감소한다. 따라서  $G(=Gd)=Ge$ 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룹 A의 기대성장률}={그룹 B의 기대성장률}이 요구된다.

요컨대, 양 그룹(대표기업)의 기대성장률을 각각  $eg(A)$ ,  $eg(B)$ 라 표기할 때, 균형  $G=Ge$ 에서는  $eg(A)=eg(B)$ 의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균형의 조건)  $G=Ge$ 이면  $eg(A)=eg(B)$ 가 충족된다.

이제 그러면 기업의 기대성장률(성장률의 기대치)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목표성장률이 주어진 경우, 기업( $i$ )의 기대성장률( $eg_i$ )은 생산능력 증가율에 해당하는 그 기업의 목표성장률( $g_i^*$ )과 그 기업에 대한 시장수요성장률( $g_i$ ), 그 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epsilon_i$ ), 그리고 기업의 倒産가능성 등의 함수가 될 것이다. 목표성장률이 시장수요성장률보다 클수록 과잉설비가 초래되어 기업의 손실은 커지고, 따라서 도산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편의상  $g_i^*$ 과  $g_i$ 의 격차가 일정값보다 크면 기업이 도산한다고 가정한다.

[가정 8]  $g_i^* > g_i + d$  ( $d$ 는 일정 양수값) 이면 기업은 도산한다.<sup>6)</sup>

따라서 기업의 실제성장률을  $g_a$ 라 할 때  $g_a$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g_a &= -1 & \text{if } g_i < g_i^* - d \\ &= g_a(g_i, g_i^*, \epsilon_i) & \text{if } g_i \geq g_i^* - d \end{aligned} \quad (5.1)$$

단,  $g_i \geq g_i^* - d$ 의 경우

$$\min(g_i, g_i^*) \leq g_a(g_i, g_i^*, \epsilon_i) < \max(g_i, g_i^*) \quad (5.2)$$

6) 기업도산 조건식은 이 같은 형태가 아니라  $g_i^* > hg_i$  ( $h > 1$ )의 형태를 가정해도 동일하다. 즉, 기업의 도산이 시작되는 수요성장률과 목표성장률 간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보다 상당 정도 작다는 사실만 충족하면 관계식의 함수형태는 어떤 형태를 취해도 이하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rac{\partial g_a}{\partial g_i}, \quad \frac{\partial g_a}{\partial g_i^*} > 0 \quad (5.3)$$

즉, 기업의 실제성장률( $g_a$ )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g_i < g_i^* - d$ 의 경우)에는  $(-1)$ 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수요성장률( $g_i$ )과 생산능력증가율, 즉 목표성장률( $g_i^*$ ),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epsilon_i$ )에 의해 결정된다. 단, 이 경우 실제성장률은  $g_i, g_i^*$  중 작은 쪽보다 같거나 크고 큰 쪽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sup>7)</sup>

따라서 기업의 기대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g_i = \int_{-1}^{g_i^*-d} P(g_i) \cdot (-1) dg_i + \int_{g_i^*-d}^{\infty} P(g_i) \cdot g_a(g_i, g_i^*, \epsilon_i) dg_i \quad (6)$$

( $P(g_i)$ : 주어진  $G$ 하에서 개별기업의 수요성장률의 확률분포함수 )

이제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9]  $g_a$ 의 함수형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즉,  $\epsilon_i = \epsilon_j (\forall i, j)$

[가정 10]  $G$ 가 주어진 경우 수요성장률의 확률분포( $P(g_i)$ ) 역시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기업규모가 서로 다를 경우, 수요성장률의 확률분포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기업규모의 차이는 시장전체규모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보아 수요성장률의 확률분포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대표기업  $A, B$ 의 기대성장률의 차이

$$\begin{aligned} &= eg(A) - eg(B) \\ &= \left\{ \int_{-1}^{g_A^*-d} P(g_i) \cdot (-1) dg_i + \int_{g_A^*-d}^{\infty} P(g_i) \cdot g_a(g_i, g_A^*, \epsilon) dg_i \right\} \end{aligned}$$

7) 실제성장률이  $g_i, g_i^*$  중 큰 쪽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면 극대화를 통한 목표성장률 설정의 의미가 없게 된다.

$$\begin{aligned}
& - \left\{ \int_{-1}^{g_B^*-d} P(g_i) \cdot (-1) dg_i + \int_{g_B^*-d}^{\infty} P(g_i) \cdot g_a(g_i, g_B^*, \epsilon) dg_i \right\} \\
& \quad (\text{단, } g_B^* - d > -1 \text{ 가정}) \\
& = \int_{g_B^*-d}^{g_A^*-d} P(g_i) \cdot (-1) dg_i + \int_{g_B^*-d}^{g_A^*-d} P(g_i) \cdot [-g_a(g_i, g_B^*, \epsilon)] dg_i \\
& \quad + \int_{g_A^*-d}^{\infty} P(g_i) \cdot [g_a(g_i, g_A^*, \epsilon) - g_a(g_i, g_B^*, \epsilon)] dg_i \quad (7)
\end{aligned}$$

이제  $G=Ge$ 의 균형이 성립되었다고 하자. 균형에서  $eg(A)=eg(B)$ 이므로 식 (7)=0이다.

식 (7)의 각항의 값을 살펴보면, 제1, 제2항은 (-)값을 가짐을 쉽게 알 수 있고, 제3항은 [가정 9]와  $g_A^* > g_B^*$  및 (5.3)으로부터

$$[g_a(g_i, g_A^*, \epsilon) - g_a(g_i, g_B^*, \epsilon)] > 0 \quad (8)$$

이므로, (+)이다.

즉,  $eg(A)=eg(B)$ 의 균형조건은, 도산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의 기대성장률은 그룹 A가 그룹 B보다 높으나 그룹 A의 도산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적극적인 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극적인 기업은 그만큼 도산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균형에서 적극적인 기업그룹의 기대성장률은 소극적인 기업그룹과 같게 되는 것이다.

#### 4. 균형의 이탈과 기업구성의 변화: 이륙(take off)

그런데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 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졌다고 가정해 보자. 앞에서 상정한 루이스적 경제의 가정에 합당한 예를 든다면, 저성장균형에 빠져 있는 저개발경제에서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성장촉진정책을 실시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결과 실제성장률( $G$ )이 기업들이 예상한 성장률( $Ge$ )보다 높아졌다고 할 때,  $eg(A)$ 와  $eg(B)$ 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Proposition 1:  $G=Ge$ 이면  $eg(A)=eg(B)$ 가 성립한다고 할 때,  $G>Ge$ 이면  $eg(A)>eg(B)$ (즉, 식 (7)>0)의 관계가 성립한다.

(증명) 먼저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Ge$ 는 일정하고  $G$ 가 상승하여  $G>Ge$ 로 된 경우를 상정하여, 식 (7)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본다.

개별기업에 대한 수요의 확률분포함수  $P(g_i)$ 는 경제 전체의 실제성장률  $G$ 를 중심으로 하는 분포이므로  $G$ 의 상승은  $P(g_i)$ 의 분포를 그만큼 右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임의의  $m$ 에 대해

$$\frac{\partial P(g_i | g_i > m)}{\partial G} > 0 \quad (\text{단, } m: -1 \text{ 보다 큰 임의의 값}) \quad (9)$$

의 관계가 성립한다.

아울러  $P(g_i)$ 는  $G$ 에 대해 근사적으로 대칭적인 분포라 볼 수 있으므로, 아래 관계를 충족하는 임의의 값  $u, v$  및  $G_0$ 에 대해

$$\frac{\partial P(g_i | u > g_i > v)}{\partial G} \Big|_{G=G_0} < 0 \quad (10)$$

(단,  $u, v$ 는  $\left[ \frac{(u+v)}{2} < G_0 \right]$ ,  $[u > v]$ 인 임의의 값)

의 관계가 성립한다(〈그림 2〉에서 빗금친 부분의 면적 감소).

이제 위 특성을 바탕으로  $G$ 상승시 식 (7)의 값변화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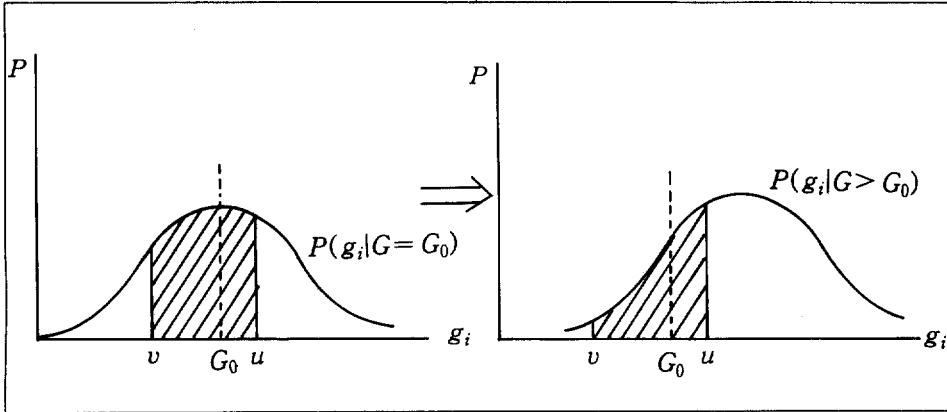
① (7)식 제3항: 개별기업의 목표성장률( $g_i^*$ )은 기업이 예상하는 추세성장률( $Ge$ )로부터 결정되므로  $G$ 의 상승시  $Ge$ 에 변화가 없는 한 기업의 목표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frac{\partial g_i^*}{\partial G} \Big|_{Ge=\bar{G}} = 0 \quad (11)$$

따라서  $Ge$  불변,  $G$ 변화시  $g_A^*, g_B^*, \varepsilon$  모두 불변이므로

$$\frac{\partial [g_a(g_i, g_A^*, \varepsilon) - g_a(g_i, g_B^*, \varepsilon)]}{\partial G} \Big|_{g_i=\bar{g}} = 0 \quad (12)$$

〈그림 2〉



이고, 또 식 (9)로부터

$$\frac{\partial P(g_i | g_i > g_i^* - d)}{\partial G} > 0 \text{이다.} \quad (13)$$

따라서 식 (8), (12), (13)으로부터 제3항의 값은 증가한다.

② 식 (7) 제1, 제2항: [가정 6]과  $d > 0$ 으로부터

$$\frac{(g_B^* - d) + (g_A^* - d)}{2} < G_e < G \quad (14)$$

식 (14), (10)으로부터

$$\frac{\partial P(g_i | g_A^* - d > g_i > g_B^* - d)}{\partial G} < 0 \text{이다.} \quad (15)$$

따라서 제1항과 제2항 역시 증가한다(절대값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G$ 상승시 식 (7)의 값은 증가한다.

균형의 가정에서  $G = G_e$ 이면 (7)식의 값=0 이므로,  $G$ 가 상승하여  $G > G_e$ 인 경우 (7)식은 陽의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논리는  $G > G_e$ 의 관계를 충족하는 임의의  $G$ ,  $G_e$ 에 대하여 식 (7) > 0 이 된다는 것으로 간단히 확장될 수 있다. (7)식의 값은 앞의 기대성장률 결정식에서 보듯이, 그 期의  $G$ ,  $G_e$  값이 주어지면 일의적으로 결정되며, 과거의  $G$ ,  $G_e$

값의 경로에는 영향받지 않는다. 예컨대,  $G=0.7$ ,  $Ge=0.5$  인 경우, 그것이 前期에  $G=0.5$ ,  $Ge=0.5$ (또는  $G=0.6$ ,  $Ge=0.5$ 이든)였던 것이  $G$ 가 상승한 경우이든, 또는 前期에  $G=0.7$ ,  $Ge=0.7$ 이었던 것이  $Ge$ 가 하락한 경우이든 간에 관계없이 식 (7)의 값은 동일하다. 즉,  $G$ 가 상승하였건  $Ge$ 가 하락하였건  $G$ ,  $Ge$ 의 값들이 같다면, 식 (7)의 값도 같으며, 따라서  $G$ 가 상승한 경우만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상으로부터 일반적으로  $G > Ge$ 이면  $eg(A) > eg(B)$ 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증명 끝)

다시 말해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경우, 성장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그룹이 성장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그룹보다 확률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다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균형에서 양 그룹의 기대성장률을 같게 하는 것은 倒産可能性의 존재이다. 즉, 그룹 A(또는 대표기업 A)는 성장에 적극적인 만큼 그룹 B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와 동시에 도산가능성도 그룹 B보다 크기 때문에,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 그룹의 기대성장률에는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성장률이 예상 외로 높아진 경우 도산가능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양그룹의 기대성장률에 불균형이 초래된다. 물론 이 경우도 여전히 그룹 A의 도산가능성은 그룹 B보다 높지만, 위 식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도산가능성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도산가능성이 높은 그룹 A의 기대성장률을 더 많이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룹 A의 기대성장률이 그룹 B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예상 외로 경제성장이 높아진 경우, 적극적 행태를 가진 기업이 보수적인 기업보다 이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관계는 직관적으로도 높은 설득력을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이 경우 그룹 A의 시장 내 비중을  $s(A)$ , B의 비중을  $s(B)$ 라 하면, (Proposition 1)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frac{d(s(A))}{dt} > \frac{d(s(B))}{dt} \quad (16)$$

단,  $t$ : 시간

기업들이 기대를 바꾸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예상 외의 성장이 일정 기간 지

속된다면 그룹 A의 시장 내 비중은 증가한다.

$$s(A) > s(B) \quad (17)$$

즉, 적극적 유형의 기업이 시장 내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g_A^* > g_B^*$ 이 경우, (4), (17)로부터  $Gd$ 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Gd \left( \equiv \sum_{i=1} g_i^* \cdot s_i \right) > Ge \quad (18)$$

가 불가피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대성장률의 격차로 시간경과와 더불어 그룹 A의 시장점유율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시장은 A 유형의 기업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띠게 되며,<sup>8)</sup> 이는 마치 전체 경제가 적극적 편향(A그룹 유형의 특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적극적 유형 기업의 비중이 지배적이 됨에 따라 경제 전체로서도 사전적 성장률이 예상추세성장률을 상회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5. 누적적 변화: 경제의 적극편향화와 성장의 가속

루이스경제의 조건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Gd$ 는 곧 다음기의 성장률( $G$ )을 결정한다. 따라서 식 (18)에 의해  $Gd$ 가 상승하면 이는 곧 실제성장률( $G$ )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가져오는 외생적 힘이 없어도 성장률은 애초 균형에서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Ge$ 의 조정이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진다고 가

8) 단, 이같은 결과는 시장평균보다 적극적(성장지향적)인 기업그룹과 그렇지 않은 기업그룹이라는, 시장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기업(그룹) 간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일반적으로 성장지향적인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목표성장률분포의 우측사면에 위치하는 두 기업(다같이 시장평균보다 성장지향적인 두 기업)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 두 기업의 목표성장률을  $\alpha, \beta (\alpha > \beta)$ 라 할 때, 기업도산을 가져오는 수요성장률인  $\alpha - d, \beta - d$ 들이 수요성장률 확률분포의 우측사면에 위치하였다면  $((\alpha - d), (\beta - d) > G)$ , 식 (7)의 제1항과 2항이 예상치 않은  $G$ 상승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절대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예상치 않은  $G$ 상승의 경우 목표성장률  $\alpha$ 인 기업의 기대성장률이 목표성장률  $\beta$ 인 기업의 기대성장률보다 반드시 높아진다. 그러나 이 경우 예상치 않은  $G$ 상승시 일반적으로 목표성장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한다면,  $G > Ge$ 의 관계는 지속된다. 따라서  $eg(A) > eg(B)$  및  $A$ 그룹의 비중증가( $s(A)$ 의 상승)는 계속하여 진행된다. 즉, 적극적 유형의 기업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경제는 점점 더 성장지향적인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기대보다 높은 성장이 지속되면  $Ge$ 는 점차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목표성장률  $g_i^*$ 는 기업이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Ge$ )의 함수이기 때문에,  $Ge$ 가 상향조정되면  $g_i^*$  및 경제의 사전적 성장률( $Gd$ )은 더욱 상승한다.  $Ge$ 의 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G > Ge$ 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 루이스적 경제의 가정이 성립하는 한 실제성장률(사전적 성장률), 기대성장률, 기업의 목표성장률은 누적적인 상승과정을 보인다. 즉, 전체경제의 적극편향화(적극적 기업의 비중증가추세)와 성장가속의 누적적 상승과정(고도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6. 루이스경제조건의 소멸 : 고도성장 종료와 구조조정

물론 이 같은 누적적 과정(고도성장)은 무한정 가능하지는 않다. 모형 논리에 따르면 고도성장의 누적적 과정은 위에서 말한 루이스적 경제조건이 유효한 한에서만 성립한다. 명백히 고도성장을 통해 유희노동력이 소진되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루이스적 경제조건은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더 이상 성립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Gd$ 가 그 대로 실제성장률로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누적적 과정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가 보인 논리는 루이스경제의 가정하에서 전개된 것이므로 이 가정이 소멸된 이후를 분석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위 논리를 응용함으로써 루이스조건 소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시사는 얻을 수 있다.

루이스적 경제에서는 경제성장률이 기업이 의도하는 사전적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지만, 루이스적 조건이 소멸되면 성장률은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루이스적 조건이 사라진 시점이 그 경제의 steady state 도달시점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신고전과 성장이론에 따를 때, steady state 상태에 도달하면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의 합으로 제약된다. steady state 성장률을  $G_s$ 라 표기할 때, steady state 상태에 도달하면 궁극적으로  $Ge = Gd = G = G_s$ 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고도성장과정을 통해  $Gd$ 와  $Ge$ 는 누적적으로 상승하여 왔기 때문에

$Gd$  및  $Ge$ 와  $Gs$ 의 격차는 적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Gd$ ,  $Ge$ 는  $Gs$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Gd$ 의 하향조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는  $Ge$ 의 하락으로 기업들의 목표성장률( $g_i^*$ )이 하락함으로써, 다른 하나는 적극적 기업(그룹  $A$ 에 속한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하여 기업구성이 변화(그룹  $A$ 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가능하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과정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고도성장의 종료와 더불어 기업들의 기대성장률 하향조정과 아울러 적극적 기업의 도산증가를 통한 기업구성의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고도성장 종료 이후 실제성장률이 낮게 제약되면, 고도성장기를 통해 높아진 시장의 적극편향화는 이제는 과도한 다이내믹즘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에 따라 기업구성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조정폭은 고도성장 종료에 따른 실제성장률의 하락폭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다.

### Ⅲ. 모형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 1. 모형의 경제적 의미

이상에서 제시한 모형의 전개과정은, 수요측면에서 본 고도성장의 전개과정에 다름 아니라 볼 수 있다. 본고의 모형에서 고도성장은 공급측면에서의 잠재적 조건(루이스경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陽)의 성장률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촉발된다. 성장충격이 기업구성의 변화로 이어지면 성장률의 상승은 지속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로스토(W. Rostow)의 이륙(take-off), 또는 이른바 빅 푸시(big push)에 해당하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고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모형 논리에 따를 때, 고도성장이 실제 촉발되기 위해서는 양의 성장률충격은 기업구성의 의미 있는(significant)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크기 내지 지속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sup>9)</sup> 이 크기는 이륙을 위한(또는 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변화의 threshold level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의 성장률충격에 의해 기업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고도성장은 자기실현 메커니즘을 확보하게 된다. 그 이후는 하나의 누적적 상승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적극적 기업의 비중은 증가

9) 물론 이는 모형의 논리적 맥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일 뿐, 모형에서 어떤 (누적적 과정을 촉발시키는 충격의) 임계치의 존재나 그 크기가 수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율 및 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위 모형은 이 같은 논리로부터 고도성장경제에서 기업들이 왜 그토록 강한 성장지향성을 보이는데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고도성장(성장률의 상승)이 성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생존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시장구성을 성장지향적인 기업이 지배적인 형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설명논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의 상승이 기업구성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모형에서는, 성장이 예상 외로 높아진 경우, 이것이 적극적(성장지향적)인 기업의 도산가능성을 감소시켜 이들의 기대성장률을 안정지향적인 기업보다 더 크게 함으로써 기업구성이 변화함을 보인다. 그 때문에 성장충격하에서 성장지향적인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루이스적 경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제에서) 이는 다시 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누적적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설명논리는 성장지향성의 배경을 개별기업의 행태변화가 아닌 기업구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한편, 모형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히 보였듯이, 본고의 모형은 고도성장 종료 이후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흥미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고도성장이 종료되면, 고도성장기를 통해 예상성장률의 상승과 기업구성의 적극편향화에 의해 높아진 사전적 성장률은 공급측면에서 규정되는 실제성장률 수준까지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업구성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요컨대, 고도성장의 종료는 기업구성의 재조정을 통한 성장지향성의 완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이나 고도성장 종료 이후 일본 경제의 경험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시사를 갖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 한국의 기업행태 및 최근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한 시사점

본고의 모형에서 도출되는 논리는, 금융외환위기 이후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팽창지향적 행태에 대한 평가문제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문제 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기업의 행태적 특성은, 본고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

른 측면, 예컨대 정치경제학적이거나 사회학적 또는 문화적 측면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논리는, 그러한 부분과 아울러 한국 기업의 행태가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역사적 환경과 일반적인 기업의 극대화행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기업들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앞에서 지적했듯이 본고의 논리는 한국 기업의 성장지향적 행태가 기업의 최적화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온 높은 팽창지향적 행태는 적어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본고의 논리에 따르면 이 같은 기업행태는 고도성장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한국 경제가 금융외환위기의 충격에 휩쓸리면서 기업의 과도한 성장지향적 행태는 그러한 위기를 가져온 주요인의 하나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그룹의 행태를 볼 때, 무리한 팽창지향성이라 할 만한 부분은 분명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한 비판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또한 한국 기업들이 왜 그토록 팽창지향적인 행태를 보여 왔는가라는 문제를 돌이켜 본다면, 굳이 본고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태가 적어도 최근까지는 성공적인 결과와 보상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과도한 팽창지향성과 적극적 성장추구의 경계를 가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초기를 회고해 보면, 상식적으로는 무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부 기업가의 모험적 행태가 예상 밖의 성공을 가져온 예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기업가들의 행태가 있었기에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부분도 존재할지 모른다. 본고의 모형은, 바로 이 같은 부분들, 즉 한국 기업의 성장지향적 행태가 고도성장이라는 환경에 의해 장려되고 또 역으로 그러한 행태가 고도성장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논리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기업행태에 대한 평가문제와 최근 경제위기하에서 요구되는 기업행태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또 별개이다. 과거의 기업행태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해서, 최근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기업행태의 변화 요구를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오히려 본고의 논의가 시사하

는 바는 그 반대이다. 본고의 논리는 고도성장 종료 이후(또는 루이스적 경제조건의 소멸 이후)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 온 기업행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함을 보여 주고 있다. 제반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 경제는 적어도 1990년대 초 이후에는 고도성장의 종료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행태의 구조조정문제는 비단 최근의 금융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한편, 본고의 관점은 한국 기업의 행태와 최근 금융외환위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제공한다. 위에서 말한 대로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이후 고도성장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면, 본고의 논리에 따를 때, 팽창지향적 기업행태 및 기업구성은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우선 고도성장기를 통해 지속되어 온 한국 기업의 그러한 행태가 새삼 최근에 와서 문제를 낳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큰 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이처럼 경제가 커다란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다면, 이는 그 경제에 한층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은, 동남아에서 발생한 위기에 한국 경제가 휩쓸리게 된 배경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논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10) 강두용(1998) 참조.

11)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종료가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본고의 논리에 따를 때, 적어도 금융외환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1997년 중반까지의 한국 경제에서의 기업도산사태(韓寶, 기아 등의 도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는 고도성장 종료에 따른 기업구성 재조정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이같은 기업도산사태는 고도성장 종료에 따른 자연스런 구조조정과정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도산사태 자체가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이거나 또는 징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도산사태의 처리과정이 원활치 못하였다거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 경제가 이 같은 구조조정을 겪는 상황에서 동남아에 외환위기가 닥침으로써 이것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는 논리는 가능하다. 다만, 팽창지향적 기업행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산사태 자체를 문제시하여 이것을 위기의 징후로 보는 시각은 본고의 관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2) 다만, 이같은 시각이, 최근 경제위기의 주원인을 한국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서 찾는 관점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리를 더 확대할 때, 고도성장 종료 이후, 기업행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의 내부적 배경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논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와 위기의 주원인이 바로 그러한 내부적 조정실패라는 관점은 별개이다. 설사 내부적 조정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근상황과 같은 위기로 연결된 것은 외부환경적 요인(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시스템의 문제와 같은)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 IV. 경험적 근거

본고의 모형에서 제시된 고도성장과 기업 다이내미즘의 논리는 실제 고도성장을 거친 한국이나 일본 등의 경험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는 서두에서 이미 거론하였지만 실제 고도성장경제에서의 투자율추이와 관련된 사실을 들 수 있다.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투자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유난히 높을 뿐 아니라, 더욱이 투자율이 고도성장 진전과 더불어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그림 3〉 참조). 고도성장과정을 통해 경제의 성장편향성의 누적적 증가를 보이는 본고의 모형은 이같은 특징적 현상과 잘 부합된다.

둘째로는 고도성장의 기대(예상)과의 관련성이다. 본고의 모형에 따르면 고도성장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실제 고도성장기의 우리 나라나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실제 고도성장이 그러한 형태(예상보다 높은 성장)로 진전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양국의 고도성장기 경제계획에서의 경제성장의 실적치와 계획치(전망치)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실제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 성장률의 전망치가 실적치를 대부분 하회하는 추이를 나타내,<sup>13)</sup> 고도성장이 예상 밖의 높은 성장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한국의 경우, 역시 고도성장기를 통하여 이른바 경제개발계획에서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계획치를 초과하여 왔음을 상기할 수 있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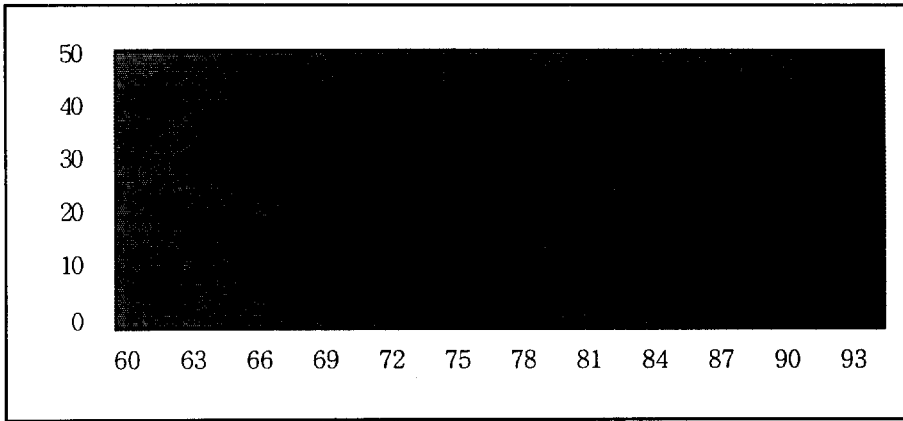
셋째로는 고도성장 종료 이후 조정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본고의 논리에 따르면 고도성장 종료와 더불어 경제는 과도한 다이내미즘의 조정과정을 겪게 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조정과정은 기업행태 내지 구성의 커다란 변화, 즉 기업도산의 증가와 기업행태의 보수화(적극성의 감소)를 수반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고도성장의 종료시점에 와 있다고 보이는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사적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 경제는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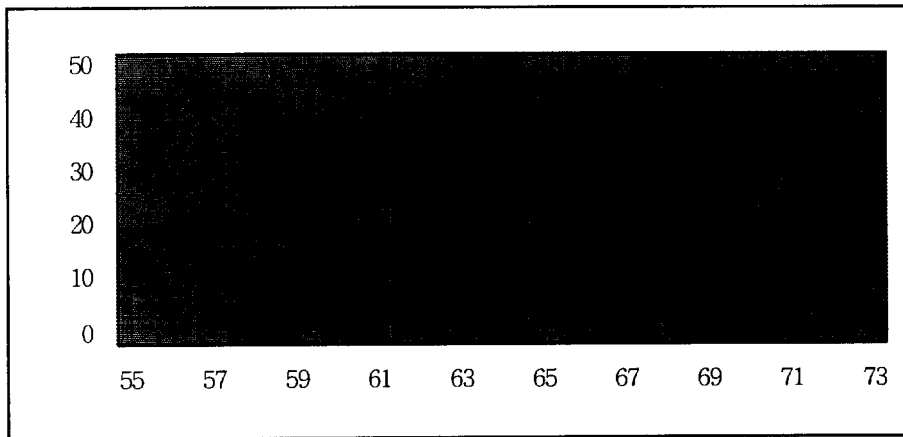
13) 반면 고도성장 종료 이후에는 뚜렷한 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 고도성장기 한국과 일본의 투자율추이(%)

A) 한 국



B) 일 본



주: 한국은 총투자/GDP, 일본은 민간총투자/GNP.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경제계산연보』.

초에 고도성장 종료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경제에서는 금융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인 1996-1997년 중반경에 이미 대규모의 기업도산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금융외환위기의 내부적 배경으로서 한국 기업의 팽창지향적 행태가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 바, 한국 기업의 그러한 행태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최근에 이르러 그것이 문제를 낳아 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측면들은 고도성장 종료 이후 기업행태 및 구성의 대폭적 변화를 시사하는 모형논리와 잘 부합된다.

〈표 1〉 일본의 성장률 예측과 실적

(단위: %)

연	(A) 實質GNP 成長率	(B) 政府전망치	(C)=(B)-(A)
1955		4.5	
1956	6.3	4.2	-2.1
1957	8.2	6.5	-1.7
1958	6.7	3.0	-3.7
1959	11.0	5.5	-5.5
1960	12.0	6.6	-5.4
1961	11.5	9.2	-2.3
1962	7.6	5.4	-2.2
1963	10.0	6.1	-3.9
1964	9.7	7.1	-2.6
1965	6.3	7.5	1.2
1966	11.2	7.5	-3.7
1967	10.9	9.0	-1.9
1968	12.8	7.6	-5.2
1969	12.1	9.8	-2.3
1970	8.1	11.1	3.0
1971	5.2	10.1	4.9
1972	9.0	7.2	-1.8
1973	4.7	10.7	6.0
1974	-0.2	2.5	2.7
1975	4.0	4.3	0.3
1976	4.0	5.6	1.6
1977	4.8	6.7	1.9
1978	5.1	7.0	1.9
1979	5.5	6.3	0.8
1980	3.2	4.8	1.6
1981	3.2	5.3	2.1
1982	3.5	5.2	1.7
1983	3.0	3.4	0.4
1984	4.5	4.1	-0.4
1985	4.8	4.6	-0.2
1986	2.9	4.0	1.1
1987	4.9	3.5	-1.4
1988	5.9	3.8	-2.1
1989	4.8	4.0	-0.8

자료: 經濟企劃廳, 『見通しと經濟運營の基本的態度』(吉川洋, 1992, p.179에서 재인용).



〈표 2〉 고도성장기 한국의 성장률전망(계획치)과 실적치

(단위: %)

기 간	제1차계획 (1962-1966)	제2차계획 (1967-1971)	제3차계획 (1972-1976)	제4차계획 (1977-1981)	제5차계획 (1982-1986)	제6차계획 (1987-1991)
계획치(a)	7.1	7.0	8.6	9.2	7.6	7.3
실적치(b)	7.8	11.0	9.1	5.7	9.8	10.3
a-b	-0.7	-4.0	-0.5	3.5	-2.2	-3.0

자료: 한국은행.

또한 이러한 논리는 과거 일본이 1970년대 중반 고도성장 종료를 전후한 시점에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대체로 뒷받침된다. 고도성장 전후의 일본 기업경영구조를 비교하면 고도성장 종료 후 기업들의 경영지표는 훨씬 보수적(내지 안정지향적) 구조를 보인다(〈표 3〉 참조). 또 관련 경영지표의 변화추이도 고도성장기와 그 종료 직후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고도성장기에는 팽창지향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반면, 고도성장 종료 이후는 안정지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인다(〈표 4〉 참조). 이같은 변화들은 본고의 논리에서 제시되는 것과 일치한다. 물론 이같은 측면들이 반드시 본고의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고의 논리와 정합적인 것은 틀림없다.

〈표 3〉 고도성장기와 그 이후의 일본 기업경영구조 변화

(단위: %)

	고도성장기(1963-1972)	저성장기(1978-1987)
매출증가율	13.9	5.3
총자본증가율	13.0	5.5
경상이익증가율	10.6	7.6
자기자본비율	24.2	27.4
부채비율	313.2	273.5
내부자금비율	42.7	54.2

자료: 宇澤弘文, 1989, pp.128-130.

〈표 4〉 고도성장기와 그 이후의 일본기업경영지표 변화추이 비교

(단위: %)

	고도성장기		안정성장기	
	1963	1972	1978	1987
자기자본비율	28.2	21.0	21.8	34.3
자본금비율	17.0	9.4	7.3	8.0
부채비율	254.2	375.1	359.4	191.3

자료: 〈표 3〉과 同一.

## V. 맺음말

한국 경제나 고도성장기 일본 경제의 기업들이 왜 강한 성장지향적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본고의 설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도성장이 성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고의 기본적인 논리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물학에서의 진화논리-개체의 비동질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유형의 개체변이만이 지배적으로 선택됨으로써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진화의 성립을 설명하는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즉, 고도성장(루이스적 조건)이라하는 특정한 환경이 성장지향적인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강한 성장지향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같은 설명의 기반이 되는 것은 본고에서 보인, 성장률변화시 기업의 기대성장률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기업구성의 변화논리이다. 여기서 기업행태와 고도성장간의 인과관계는 쌍방적이며, 고도성장과 성장지향적 기업행태는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누적적 변화과정으로 나타난다.

한편, 성장변화시의 기업구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같은 누적적 변화과정을 보이는 모형의 기본논리는, 여기에서 다룬 주제뿐 아니라 다른 경제현상의 설명에도 응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모형의 논리는, 성장과 관련한 충격이 기업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전체 경제행태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로 확산되는 측면을 보인다. 이같은 기본논리는 누적적 변화의 양상을 띠는 여타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쓸모 있는 설명도구가 될 수 있다.

본고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공급측면에서 변화에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 $Gd$ 의 변화가 그대로  $G$ 의 변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루이스적인 경제를 살펴보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밖에도 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않다. 예컨대, 경제성장과 달리 침체가 심화(성장을 감소)되는 데는 공급측면에서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는 경우, 유흥자원의 존재로 성장의 제약이 약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기본논리는 적용가능하다. 즉, 고도성장과는 정반대현상인 대공황과 같은 대규모 침체의 전개과정이나, 또는 반대로 침체로부터 어떤 양(陽)의 충격이 가해져 경제의 회복이 확산되는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본고의 논리는 하나의 도구로써 응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전자의 경우 그 논리는 본고에서 살펴본 경우와는 반대의 방향이 될 것이다.<sup>14)</sup>

## 參 考 文 獻

1. 강두용,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종료문제”, 『국제경제연구』 4(2), 1998.
2. 吉川洋, 『日本經濟とマクロ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92.
3. 宇澤弘文, 『日本經濟－蓄積と成長の軌跡』, 東京大學出版會, 1989.
4. Bai, Moo-Ki,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e Developing Economies*, June. 1982.
5. Lau, L. and J. Kim,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the Pacific Rim*, Research Publication No. 295, Center for Economic Policy, Stanford Univ., 1992.
6. Lewis, W.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 1954.
7. \_\_\_\_\_, “Unlimited Labour: Further Notes”, *Manchester School*

14)  $G < Ge$ 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Proposition 1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논리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Proposition 1':  $G = Ge$ 이면  $eg(A) = eg(B)$  일 때,  $Ge - d < G < Ge$ 이면  $eg(A) < eg(B)$  (식 (7) < 0)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Proposition 1에서의 설명논리를 정확히 역으로( $G$ 가 감소한 경우로) 적용하면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

-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6, 1958.
8. Minami, R., *The Turning Point i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Experience*, Kinokunia, 1973.
  9. Odagiri, H., *The Theory of Growth in a Corporate Economy: An Inquiry into Management Preference, R&D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 Press, 1981.
  10. Solow, R.,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56.
  11. Summers, R. and A. Heston, "The Penn World Tables(Mark 5): An Expanded Set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1950-8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91.
  12.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 Press, 1993.
  13. Young, A.,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NBER Working Paper* No. 4680, March 1994a.
  14. \_\_\_\_\_, "Lessons from the East Asian NICs: A Con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38, 1994b.